

# ‘리디노미네이션’ 15년 만에 논란 재점화

(화폐단위를 낮은 단위로 조정하는 것)

# “지금도 화폐개혁 적기” vs “인플레·비용 부담” 공방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토론회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소액 절상으로 인플레 가능성 상승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준욱 전 키움증권 연구원. /김희주 기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념조차 생소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축소)이 15년 만에 최근 재논의 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문제 제기를 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일종의 화폐개혁이다. 예를 들어 4000원을 4원 또는 4환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후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가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학계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리디노미네이션은 ‘0’을 세 개 떼어내는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과도한 비용, 지하자금 양성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리로 제기된다.

### ◆“지금도 적절한 시기… 빠른수록 좋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이원욱·최운열·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재·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재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축사에서 “화폐단위 변경은 ‘0’ 세 개를 떼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15년 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는 총재 재임 시절인 2004년 한은 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00원에서 1환으로 바꾸는 내용의 ‘화폐 선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화폐 단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총금융자산, 국민순자산 등이 ‘조’를 넘어 ‘경’까지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 달러 환율이 100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는 지금이 적기이나 잠점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약 10년에 걸쳐 장기기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

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적 비용 등 비용 고려해야”… 낙인효과 우려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협상력 문제가 있다.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재분배 방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대원군의 당백전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화폐개혁에 정치적 동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했다”며 “기술의 발달로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욱 전 키움증권 연구원은 낙인효과, 트라우마 등을 언급하며 “터키는 정책금리가 연 25%에 이르는 사실상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선진국 가운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세계 몇 위나 할 정도로 외국 투자자들의 평가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며 “화폐단위 변경 자체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노동생산성 측정값) (단위: %)

기업규모 (적정고용 노동자수 기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R/E) <sup>1)</sup>			측정값 <sup>2)</sup>	
	보정 전	보정 후		%	보정 후 - 보정 전
		조정합계	단순합계		조정합계
300인 미만 (A)	100.0	96.3	95.8	3.9	4.4
300인 이상 (B)	210.7	193.8	189.5	8.7	11.2

(부가가치 노동생산성(V/E), 제조기업 기준. 주: 1) 부가가치는 2015년을 기준으로 CPI를 이용하여 실질화. 2) 300인 미만 기업의 보정 전 노동생산성(=100)을 기준으로 정규화. /자료= 한국은행

# “파견 등 간접고용 효과, 고위기술직↑”

제조업에선 노동생산성 낮아져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과 같은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따르면 고위기술 위주의 서비스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노동 숙련도가 높은 제조기업에서는 반대로 생산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간접고용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되면 ‘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0.9% 낮아졌다. 고숙련노동 업종은 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숙련도가 높은 업종이 해당된다.

반면 컴퓨터시설관리, 프로그래밍 서비스 등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요구되는 ‘고위기술 서비스 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1%포인트 확대될 때 노동생산성이 2.2% 늘었다.

식료품, 음료 등 기술숙련도가 낮아 인적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비숙련노동 위주의 제조기업’은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기업이 보정 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은 선도기업을 단순히 추종해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비숙련·숙련, 저위·고위기술 등 자신의 소요기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 新외감법 도입에 취약분야·대기업 감시 강화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상장법인 등 169개사 재무제표 감리

감독당국이 올해 취약분야와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오류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고, 중요요류는 엄중 조치하는 등 제재조치도 합리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新)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개편된 회계감독들에 맞춰 이 같은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나 회계분식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큰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기업 실적도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은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1대 1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인력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하며, 앞서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한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

### 2019년 심사·감리업무 운영목표

- ◆ 회계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 ◆ 新외감법 체제에 맞춰 전면개편된 회계감독들 구현

#### 과제

- ▶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 ▶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 ▶ 제재조치 합리화
- ▶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맞춰 회계위반 발견시에는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고, 핵심사항·특이 사항위주로 재무제표를 점검한다.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를 이행할 경우 경조치로 끝내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특히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기준을 도입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등도 부과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9개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126개사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와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등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7개사를 대상으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개선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l@